



1월 31일(수) 11:30 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

부장 이진원, 사무관 송강일
(02-2100-2032, 2041)

평창동계올림픽 대비, 테러경보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합니다.

- 22(G-7) 전국 '관심'→'주의', 26(G-3) 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 '주의'→'경계' -
- 평창·강릉 등 대회 개최 지역 이외 대비태세 강화 등 최종 준비상황 점검 -

□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(센터장 문영기)는 1월 31일(수)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8개 관계기관*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

* 참석 : 국가안보실, 국가정보원, 행정안전부, 법무부, 국방부, 국토교통부, 경찰청, 해양경찰청 국장급

○ 오늘 회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실무회의로서 테러경보상향 조정계획을 심의하고 평창·강릉 이외지역 테러대비태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

□ 정부는 올림픽 개최일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·조정하고 각 기관은 이에 맞춰 소관분야 대응태세 실행 등 더욱 고도화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

○ 테러경보를 G-7인 2월 2일(금)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'관심'에서 '주의'로 상향하고 G-3인 2월 6일(수)에는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 '경계'로 격상할 예정입니다.

※ 테러경보는 '관심', '주의', '경계', '심각' 4단계로 분류

- 이에 따라 경찰청·국토교통부·해양경찰청 등은 2단계 ‘주의’ 시에는 자체 대비태세점검 및 공항·항만 보안검색을 강화하고
 - 3단계 ‘경계’ 시에는 대테러 상황실·비상 근무체제 가동 및 테러 대상시설 경비인력 증원, 출입통제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또한 경찰청·국방부·법무부·국토교통부·행정안전부·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
 - ‘05년 영국 G8정상회담 런던테러, ‘13년 러시아 소치올림픽 체첸 반군 자폭테러 등 국제행사 개최지역 이외의 테러사례 및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개최지역 이외에도 테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 - 특히 지난 1월 27일 아프간 카불에서 앰블런스로 위장한 차량 자폭 테러를 계기로 구조·구급용 차량에 대한 별도 비표 발급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.
 - 또한, 국내에서는 주한공관, 미국부대 등 외국정부시설과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경비 및 불법체류자 관리, 항공·철도보안, 해상경비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.
- 한편, 오늘 경기장·선수촌·미디어촌 등 현장안전통제실(18개) 개소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회시설 안전확보 및 인원·차량 출입통제 실시 등 본격적인 현장 대테러안전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